

개인채무조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 설명자료

2016. 1. 28.

관계기관 합동



목 차



I.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워크아웃	1
II.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별 맞춤형 지원	4
III. 신속·체계적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5
IV.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7
V. 취약계층 채기 지원 확대	9

I.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워크아웃이 보다 활성화됩니다.

1.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 **(현행)**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과 별개로 **확일적으로 50% 감면율**(상각채권 대상)이 적용되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차등화 하되,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적으로 적용

① (가용소득) 채무자의 月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출

*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참조)의 150% 수준으로 계산

② (원금감면율) 채무원금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상환지수 = 채무원금 / 가용소득)을 상환능력의 지표로 보아, 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

	채무원금 小	채무원금 大
가용소득 大	낮은 원금 감면율(최소 30%)	30%~60% 사이
가용소득 小	30%~60% 사이	높은 원금 감면율(최대 60%)

<예시> 채무원금(상각채권)은 3,300만원으로 동일하나, 月가용소득은 각각 36만원(A씨), 46만원(B씨)으로 다른 경우

※ 원금 감면율(%) = 30 + (상환지수 - 36) X 0.5

< A씨: 月가용소득 36만원 >			< B씨: 月가용소득 46만원 >		
	현행	개선 후		현행	개선 후
채무원금/ 가용소득	상환지수 92 (3,300 / 36)		채무원금/ 가용소득	상환지수 72 (3,300 / 46)	
감면율	50%	58%	감면율	50%	48%
감면 후 채무원금	1,650만원	1,386만원	감면 후 채무원금	1,650만원	1,716만원
총상환기간	46개월 (1,650 / 36)	39개월 (1,386 / 36)	총상환기간	36개월 (1,650 / 46)	38개월 (1,716 / 46)
→ 원금 감면율 8%p 증가 상환기간 7개월 단축			→ 원금 감면율 2%p 감소 상환기간 2개월 연장		

2.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한 채권의 채무조정도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현행)**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종전 자산관리회사(신용회복기금 등)가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시 적용했던 최대 감면율이 30%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에 설정된 기준임

□ **(개선)** 합리적 근거없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60%)을 적용하여,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채권자간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원활한 절차진행을 유도

* 신복위 전체 워크아웃 대상채권 중 매입채권은 약 45%(15.9월) 수준을 차지

3.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현행)**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신복위에 해당 채권내역을 신고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포함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부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한, 신복위는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상환요청 등) 확인 후 채무조정안에 포함 여부를 판단(금융회사-신복위간 확인시스템 구축)

참고 신복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시뮬레이션)

◇ '14년 신복위 채무조정자 기준, 원금 감면율 차등화(50% → 30%~60%), 매입채권 동일 감면율 적용(최대 30% → 60%), 상환 지수를 반영한 채무조정시,

➔ 1인당 추가 원금 감면 증가액은 약 90만원 수준(평균 원금액 2,096만원)으로 예상

① (적용 前) '14년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자는 약 6만명이며, 대상 채권의 원금은 총 1.24조원 규모

➔ 실제 채무조정 이후 원금 감면액은 약 2,500억원, 미상각 채권을 포함한 전체 원금 감면율은 약 20%로 나타남

* 채무자가 신복위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상각채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연체 채권(미상각채권 포함)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됨

② (적용 後) '14년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차등 감면율' 적용시, 원금 감면액은 약 530억원 증가(1인당 약 90만원 수준)하고 전체 감면율은 약 4.5% 상승

➔ 채무자간 원금 감면 수준이 탄력적으로 재조정되는 효과

< 탄력적인 차등 감면율 적용시 전체 감면액·감면율 변화 >

현 행		개선 후
원금 12,453억원 X 전체 감면율 20.1%	➔	① 감면율 차등화 (50% → 30%~60%) △ 127억원 (+1.2%)
 △ 2,523억원 (조정 후 원금 9,930억원)	+	② 매입채권 동일 감면율 적용 (최대 30% → 60%) △ 408억원 (+3.3%)
	➔	원금 12,453억원 X 전체 감면율 24.6%
		 △ 3,058억원 (조정 후 원금 9,395억원)

II.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별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 캠프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탄력적 지원 및 관리 강화

* 개정 캠프법 시행('15.9월)으로 캠프가 국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재산·과세정보 관련 자료제공 요청 가능

1.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 지원이 활성화됩니다.

□ (현행)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파악이 쉽지 않고, 채무조정 이후 변제를 시작하더라도 상환 부담으로 중도 탈락할 우려 등이 제기됨

□ (개선)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정밀한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신복위와 동일하게 30%~60%의 탄력적인 원금 감면율을 적용

○ 아울러, 月상환구조도 균등분할상환 외에 초기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체증방식' 등 다양한 방안 지원 검토

* 예시; 月상환금을 초기 3년간 10%, 나머지 7년간 90% 상환하는 방안 등

➔ '16년 기준 총 7.6만명에게 최대 약 1,200억원 추가 원금감면 지원 예상

2. 채무자의 약정체결을 위한 구체적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채무조정 약정 미체결자에 대해 안내 DM·SMS 등을 일괄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약정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채무자는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신청 의사가 크지 않고, 채무조정 안내를 채권추심으로 인식하는 경향

□ (개선)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촘촘히 파악하여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

○ 채무자별 예상 원금 감면율, 月상환금액, 채무조정 약정시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

Ⅲ.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보다 신속·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현행)** 은행·저축은행이 자체 워크아웃 추진시, 대부분 상각 채권 편입기간, 회수가능 재산보유 여부 등 단편적인 지표를 토대로 지원수준(원금감면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조기 채권회수를 위해 일시 상환(또는 단기분할상환)을 전제로 원리금 감면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 채무자의 다양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원수준·방법이 결정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일부 은행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은행·저축은행 업권에 공유·체계화

❶ **(평가지표)** 소득·재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채무자의 여건(연령, 정상거래기간, 신용관리정보 등재 건수), 연체채권 특성(연체기간, 채권액) 등 최소한 5개의 지표를 상환능력 평가시 고려

* 은행·저축은행별 여건에 따라 지표별 반영비중 조정, 추가 지표 편입 등 가능

❷ **(평가방법)** 5개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정하고, 채무자의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계량화

* 예시; 채무자의 연령이 높고, 다른 금융회사 연체도 있는 경우 → 소득창출 여력·부채구조 등을 고려하여 낮은 점수 부여

❸ **(지원방법)** 최종적으로 점수화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수준 등을 결정

* 예시; 5~50%의 원금 감면을 범위내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감면을 적용

- 아울러, 장기분할상환(최대 5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 병행

* 예시; 채무조정 후 12개월 이상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채무잔액 75% 이상을 변제한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채무원금의 5% 내에서 추가 감면 부여 검토

참 고 금융회사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시스템 [예시]

◇ 향후 은행·저축은행별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거쳐 개별·구체적 시스템 구축 추진

※ 저축은행은 운용 여력이 있는 대형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채무자) A씨(40세)**는 B은행에서 (i) 1,500만원을 2년간 연체하였으며, (ii) B은행에서의 정상거래 기간은 4년이고 (iii) 타기관 연체 등으로 신용관리정보가 2건 등재된 상황

□ **(상환능력 평가)** B은행 내규에 따라 5개 지표별 점수 합산 결과, A씨의 상환능력은 최종적으로 73점(100점 한도)으로 평가

< 상환능력 평가기준표(예시) >

구 분	배점	반영기준					평가점수
연 령	25	~30세 ○○	~40세 22	~59세 ○○	60세~ ○○		22
연체기간	20	~1년 ○○	~3년 16	3년~ ○○			16
신용관리 대상정보	20	無 ○○	1건 ○○	2~3건 12	4~6건 ○○	7건~ ○○	12
연체규모	20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16	20백만원~ ○○		16
정상거래 기간	15	~1년 ○○	~3년 ○○	~5년 7	~10년 ○○	10년~ ○○	7
합 계	100						73

□ **(지원방법)** B은행은 상환능력별 지원기준에 따라 A씨 원리금 24%를 감면하고, 5년간 분할상환토록 지원

< 채무조정 지원 기준표(예시) >

점 수	원리금 감면범위
60점 이상~70점 미만	원리금 25%~30% 이내 및 이자
70점 이상~80점 미만	원리금 20%~25% 이내 및 이자
80점 이상~90점 미만	원리금 15%~20% 이내 및 이자

IV. 신용대출 연체 예방을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 (현행) 채무조정 지원이 주로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한 측면

○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취약·서민층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

* 예시; 대출연체 → 신용등급 하락 → 금융회사의 대출회수 조치 등 →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 다중채무 불이행 우려 증가

□ (개선) 신용대출의 만기 전에 연체 우려 채무자를 체계적으로 선별·지원하는 은행권 공동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 일부 은행의 신용대출 지원·관리 모범사례를 전 은행권에 공유·체계화

❶ (지원대상) 신용대출자 중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연체 우려 고객으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고객

-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은행권 공동 선정기준*을 마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 은행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규 반영

* 예시; 대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 여타 금융회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

- 고객과 1:1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세부방안 등을 파악

❷ (안내시기) 은행이 대출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하여 “먼저” 고객을 접촉하여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❸ (지원방법)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기간(또는 거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도 안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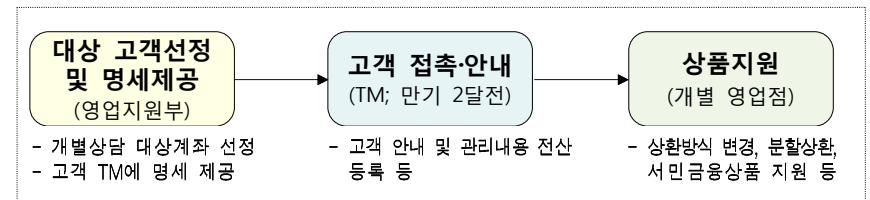
➡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시 매년 약 53만명의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참 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지원 (예시)

□ (지원 프로세스) 대출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하여 TM(콜센터), DM(우편·e메일), 영업점 안내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 실시

○ 대상 선정 및 명세 제공(본부) → 고객 TM 및 상담(영업점) → 상담내용 등록(영업점) → 다양한 채무관리 프로그램 지원(영업점)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본부·영업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지원 절차 (예시)>



<사례 예시>

◇ A씨(40세, 남)는 B은행으로부터 생활비 용도로 신용대출 20백만원을 받아 사용해오던 중, 최근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추가로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음. 평소 주변에서 카드론 사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간호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A씨는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음. 기존 대출의 만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며, 신용등급 하락하여 만기 연장이 어렵다며 상환 가능 여부를 묻는 직원의 말에 A씨는 앞이 캄캄하였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고민하던 A씨에게 은행 직원은 서민금융상품 취급대상에 해당되어 기존의 대출을 새희망홀씨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함. A씨는 B은행이 빠른 만기안내와 고객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연체에 빠지지 않게 방법을 찾아 보고 안내해주어 큰 부담을 덜게 되었음.

V.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한층 확대됩니다.

1. 금융회사 채무조정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됩니다.

□ **(현행)** 은행·저축은행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지원방법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개선)** 현재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하여 고령자(65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는

* 신복위 워크아웃시 일반 채무자(50%) 대비 우대 감면율(최대 70%) 적용대상

○ 일반 채무자 보다 추가적인 감면율(예시; 최대 20%)을 적용하는 등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부담 경감폭을 확대

※ 일부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지원 모범사례를 은행·저축은행 업권에 공유·체계화

2.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부담을 보다 경감하겠습니다.

□ **(현행)** 취약계층 중 특히 상환능력이 결여된 분들의 경우, 신복위 워크아웃을 추진하여 최대 원금 감면율 70%를 적용 받더라도 상환부담이 여전히 적지 않고,

○ 채무원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파산절차(실무적으로 채무액 1천만원 미만시 기각) 진행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선)** 채무원금이 소액(예; 1천만원)이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이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90%까지 확대 적용하여,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

➔ 매년 약 3.9천명에 대해 최대 총 280억원의 원금감면 지원 예상

3. 법원 회생·파산절차와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파산절차 진행시 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현행)**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은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파산 Fast-Track*'을 운영 중이나,

*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법률구조공단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부채증명서 생략 등 절차 신속 진행

○ 채무자가 법원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을 방문한 이후,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을 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특히, 상환 여력이 없는 파산대상자의 경우, 생계 어려움 등으로 파산실비 부담이 어려워 파산 연계가 곤란한 경우도 존재

□ **(개선)** 채무조정 신청자 중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 절차와 연계를 활성화

①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심층상담, 서류작성, 법원 신청 등의 절차를 전담함으로써 법원 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연계

※ 신복위 종합상담 결과 법원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 지원 효과가 있음

② 특히,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추가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인지대·송달료(약 15~20만원), 파산관재인 보수(약 30만원) 등